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0%대 물가시대'라니

저소득층 구매력 확대, 고용 활성화 절실 “소비 살려야”

미중 무역분쟁에 브렉시트 겹쳐
2.6~2.7% 성장률 ‘하회’ 전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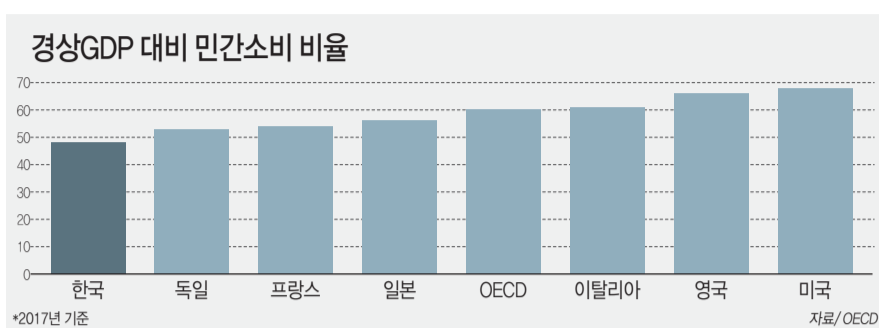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96.9%
평균 소비성향 71.1% ‘사상최저’

“요즘 장보기가 두렵다. 가족 4명이 2~3일 먹을 채소나 인스턴트 식품 몇 개만 사도 10만 원을 훌쩍 넘는다. 한창 클 시기에 아이들에게 먹일 간식은 엄두도 못낼 지경이다. 노후는커녕 당장 전세자금대출 갚기도 빠듯하다.” 마포구에 사는 주부 이라연 씨(43)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인제 좀 돈 걱정 않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0%대 물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지속해 온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안으로는 고용한파, 밖으로는 브렉시트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가뜰이나 위축된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염려된다. 전문가들은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와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절실하다고 얘기한다.

◆우울한 소비 지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정했다. 정부는 그 근거 중 하나로 민간소비가 지난해(2.8%)와 비슷한 수준인 2.7% 늘어날 것이라 예측을 꼽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다르다. 소비 현장에서 최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이 다소 완만해지고,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하방 리스크가 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성장률이 2.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에 관한) 낙관적 평가는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고령화 진행이 소비 추세를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소비 관련 경제지표는 우울한 모양새다. 우선 통계청의 통계청이 2일 공개한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9(2015=100)로 1년 전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2016년 7월(0.4%)에 이후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유가로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 지난달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달보다 0.5% 감소했다.

신사동 가로수길 강남 청담동에 이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쇼핑·음식 명소로 떠올랐던 연남동이나 이태원 경리단길, 종로 익선동도 최근엔 한 집 걸러 입차인을 구하느라 애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을 즐기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

비자도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18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 음식점의 경기지수가 뒷걸음 했다. 특히 한식 음식점업 경기지수는 65.85로 전년 대비 1.11포인트 떨어졌다. 외식업 경기지수는 50~15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성장, 10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울퉁불퉁한 전통시장이나 백화점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뜸하다.

◆고령화·부채·고용한파... 소비여력 뚝

이 같은 소비 위축의 원인은 당장 쓸 돈이 없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50대 가구주 가계의 명목 월평균 가처분소득(전국·2인 이상)은 412만 192원으로 2017년 4분기(422만 1786원)보다 2.4%(10만 1594원) 줄었다.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는 고용 한파와 금리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소비 위축은 급증하는 가계대출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9%에 달했다. 전분기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1534조 6310억원이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로 보면 평균소비성향은 2016년 71.1%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빨라진 고령화에서도 소비부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고령층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2006년 79.5%에서 2016년 67.2%로 12.3%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향후 소득의 큰 변화가 없다면 전체적인 소비 지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소비’라는 성장동력 카드를 버릴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지탱해 온 수출에 더 이상 기대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어서다. 산업연구원은 “소비 활성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와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제시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5명 중 1명 인터넷뱅 이용... 수신 17조 공무원 연금 주느라... 국가부채 1700조 육박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2주년

가입자 1천만 눈앞... 여신액 11조
시중은행도 비대면 서비스 강화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기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스마트폰으로 신분증만 촬영하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편리함이 강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수는 국민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그만큼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도 디지털금융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 5명중 1명꼴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은 891만명, 케이뱅크 고객 수는 98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5명중 1명이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2017년 7월 27일) 가입자수 18만7000명을 돌파하며 수신액 426억원, 여신액 2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카카오뱅크는 2017년 8월 300만명을 돌파한 뒤 지난해 1월 500만명, 10월 700만명, 올해 1월 8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용고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출범 첫 달(2017년 4월)에 고객수 26만명으로 시작한 이후 그 해 9월 5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말 기준 고객은 98만명을 기록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수신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각각 14조8971억원, 2조5900억원을 기록하며 총 17조4871

억원에 달했다. 여신금액도 카카오뱅크 9조6665억원, 케이뱅크 1조4900억원으로 총 11조1565억원 규모다.

◆시중은행도 디지털화 견결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시중은행도 비대면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모바일 뱅킹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원 앱’ 전략과 인증이 필요 없는 모바일 이체 서비스 등을 선보인 것.

KB국민은행은 메신저창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리브톡톡’을 마련하고 ‘KB스타 신용대출’로 비대면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증빙 서류를 간편하게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 대출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플랫폼 ‘신한솔(SOL)’을 통해 한번에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플랫폼에는 지문, 홍채 인식 등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 보안 매체 없이 연락처로 보낼 수 있는 간편이체, 신청 한 번으로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해 주는 ‘솔 편한 신용대출’, 언제든지 상담하고 뱅킹 업무도 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솔메이트’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가부채 1683조, 자산 2124조
부채 75%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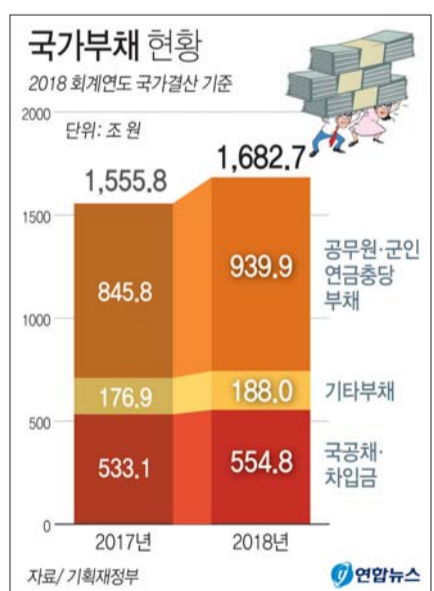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7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은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80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지난해 국유재산 가치는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0.1%)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이낙연 총리 “IMF서 추경편성 권고... 예산안 이달 중 제출”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준비해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IMF가 우리 경제 하방 압력을 지적하면서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며 “관련 부처와 고려하겠다”

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많은 과제를 직면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현시 상황은 아직도 어렵다”며 “현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예산 규모 등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국채발행까지 포함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대성 기자 bigstar@